

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국민이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정’ 발굴
 - 행정적 의무위반, 사문화된 규정 등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
- 법률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 형벌규정 개선방안 마련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법무부 차관 공동 단장)은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였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근거해 경미한 의무위반사항임에도 과도하게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을 발굴하고, 법무부의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도 추가 발굴하였다.

이렇게 발굴된 규정들에 대하여 연구기관(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법률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을 운영해 개선 필요성, 개선시 입법 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관부처·법무부·법제처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10개 부처, 22개 법률, 46개 형벌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신고 등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지나친 형사벌을 억제하고, 형벌이 필요한 경우라도 보충성·비례성 등 법원칙을 고려한다는 원칙아래 유사법률 간 법정합성·일관성 제고,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수준 간 비례성 확보,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개선시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안전 등 중대한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규정은 현행 유지한다.

< 주요 개선사례 >

구성요건	기존	개선
F4 생활밀착형 규정: 14개 규정		
●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도시지역, 공원, 교통수단,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미신고(변경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 광고물을 표시한 자	벌금 5백만원 이하	과태료 5백만원 이하
● (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제55조(제13조 제2항 단서 관련)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벌금 3백만원 이하	과태료 3백만원 이하 (※기존 제재 활용)
F5 행정적 의무위반: 15개 규정		
● (산업부) 자유무역지역법 제61조 제3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해수부) 항만운송사업법 제30조 제2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 5백만원 이하
F6 사문화된 규정: 10개 규정		
● (문체부) 뉴스통신법 제35조 제1호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사람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천만원 이하
● (해수부) 해수욕장법 제44조 제3호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한 자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선행정제재-후형벌
F7 법률 단위 검토: 7개 규정		
● (해수부) 선원법 제170조 제3호, 제4호		
퇴직금을 미지급한 선박소유자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적용 및 형량 조정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시간외수당에 갈음한 유급휴가를 미지급한 선박소유자		
● (법무부) 채무자회생법 제653조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자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 5백만원 이하

이번 전달반(TF)에서 마련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조속히 일괄개정절차를 추진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이전에 제출된 1차·2차 과제들도 국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별첨)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과제 및 향후 추진계획

< 공동 TF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	책임자	과 장	구자영 (044-215-4630)
		담당자	사무관	박재홍 (044-215-4632)
담당 부서	법무부 상사법무과	책임자	과 장	김봉진 (02-2110-3167)
		담당자	검 사	정성두 (02-2110-3741)
담당 부서	법제처 법령정비과	책임자	과 장	배개나리 (044-200-6571)
		담당자	사무관	안혜리 (044-200-6580)

